뿔난 토종 OTT "음저협 권리남용 방관"… 정부 상대 소송

웨이브-티빙-왓챠 'OTT음대협'
문체부 승인내용·절차 '위법' 주장
"과다한 요율, 이용료 인상 야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왼쪽부터)과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가 기자간담회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OTT음대협

음악저작권 요율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권리남용을 방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해 말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 음대협은 처음에 제시한 요율은 0.625%다.

OTT음대협은 이날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이 내용적,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음악사용료의 적정한 기준은 국가의 경제규모, 사회 전반의 상황, 음악산업의 발전 정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국민의식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인터넷TV(IP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다고 호소했다.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은 "문체부가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적용을 하면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으로 저작권료가 징수돼야 한다. 소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황 의장은 "OTT와 음저협 간 갈등의 본질은 음악저작권자 대 영상제작자"라며 "OTT가 서비스하는 건 음악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라 본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부 산하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 또한 10명 중 7명이 음악저작권 권리자 측에 속해 다소 편향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음저협에서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적용되는 기준인 2.5%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징수 체계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형평성이 맞는 사용기준이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OTT음대협에 소속되지 않는 KT도 개정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황 의장은 "사안을 바라보는 눈은 KT와 동일하다는 생각"이라며 "그렇지만 행정소송을 같이 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과다한 요율 적용은 결국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실제 이날 OTT음대협은 향후 사용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은 "문체부가 해외 사용료 대비 낮다고 하지만 음저협 요구를 수용할 때 월 구독료가 6~7배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라며 "이용료 인상이 빠른 시간 이뤄지기는 힘들지만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용료 인상도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경일 의장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음저협에 OTT음대협 차원 공동협상을 제안했고 내달부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와 징수규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속 알 수 없는 'AI 면접관', 공정성 논란

AI 공정성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AI 면접관 불합격 기준 불분명
사람 면접관과도 점수 차이 커
"관련 제도, 국민의 기본권 등 누락"

김민우 충북대 박사가 17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헌법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 페이스북

#. 인공지능(AI)은 면접 응시자의 점수를 A와 B+로 채점했다. 반면 면접관은 하위 2등과 1등으로 평가했다. 면접관들이 1등과 2등으로 평가한 합격자에게 AI는 B0와 B-로 점수를 매겼다.

이는 오정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정필모 의원실(더불어 민주당) 자료를 인용해 '마에스트로 연수생 합격자 150명의 점수를 분석한 결과다.

AI 면접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 변호사 17일 정필모 의원과 정보인권연구소가 주최한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경우 3년 동안 신입사원 면접에서 AI 면접을 보조수단이 아닌 당락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하지만 불합격자를 어떤 기준을 적용해 불합격시켰는지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블랙박스'로 설명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공공기관 면접에 대해 오히려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인 인사혁신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에 따르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시장 친화적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골자로 AI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다"며 "AI와 상호작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 기업의 제조물 책임, 소비자 보호 법적 규제 방안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일반법으로 하고, 인공지능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의 특별법 형태로 제정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 인권보장, 이용자를 위한 법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험 인공지능 분류체계 및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 "의료, 운송, 사법 등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분야, 부상, 사망을 초래하거나 개인이나 법인에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고위험 AI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며 "EU(유럽연합) 백서처럼 자발적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AI를 정부의 조달지침에 도입시, 각 단계별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 AI 경우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람의 감독 의무가 필요하며, 미국의 FTC(연방거래위원회)와 같이 알고리즘을 사용해 신용점수를 부여해 사람이 자동의사결정이 되는 경우, 주요 원인과 결과를 설AI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현재는 AI 법제 마련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인 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같이 참여해야 하며, 소비자, 정보인권 단체 등 시민사회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우 충북대 박사는 '헌법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이 국민처럼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과 법인격 주체성을 갖는지, 책임능력이 있고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지 주요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AI 알고리즘에 의한 인권침해, 킬러로봇 등 자율무기 통제와 AI가 만든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AI에 있는 지 AI를 개발한 사람에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본 소득제' 도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인공지능 등 새로운 지능적 존재의 법적 지위, 권리 및 민형사 책임의 범위 등 새로운 법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네이버-서울대, 'AI 윤리 준칙' 공개

내용, 실천방안 등 5개 조항 구성

네이버(주)가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17일 공개했다.

이는 2018년부터 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SAPI)와 협업한 결과물로, AI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네이버의 기업철학을 통합적으로 반영했다. SAPI는 법학, 공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협력을 통해 AI와 관련된 융합 연구를 하는 서울대 산하의 프로그램이다.

네이버는 이날 SAPI와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 현장에서 논하는 AI 윤리' 웨비나를 공동 개최하고, 네이버 AI 윤리 준칙의 배경과 내용, 실천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는 ▲사람을 위한 AI 개발 ▲다양성의 존중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의 조화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의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네이버는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AI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네이버가 AI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업 철학도 고려해 AI 윤리 준칙을 설계했다. 네이버는 향후 AI 윤리 준칙의 실천, 사례 발굴 및 개선에 있어서도 학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네이버는 AI 윤리 준칙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단계적인 실험을 통한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유연한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해, 프로젝트 진행이나 서비스 개발 시에 사안을 중심으로 문의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방송광고 결합 판매' 방통위, 전면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 감소로 인한 결합대상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 동반 감소 및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 등으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인 결합판매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지난해 진행한 결합판매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제도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국회, 광고주 등 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대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논의 주제별, 쟁점별로 집중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채윤정 AI 전문기자